

(사)한국문화정책학회
2012년도 가을 학술대회

"차기정부의 문화정책 비전"

- ☐ 일시 : 2012년 10월 19일 (금) 13 : 30 ~ 17 : 30
- ☐ 장소 :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4층 컨퍼런스 홀
- ☐ 주관 : (사)한국문화정책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목 차

● 초대 의 글 : 정홍익 (한국문화정책학회 회장) -----	2
● 축 사 :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	3
● 발표 일정표 -----	5
● 1부 기조발제 :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 과제	
유진룡 (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장) -----	7
토 론 문 : 고정민 (홍익대 교수) -----	19
김세훈 (상명대 교수) -----	21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	23
정희섭 (문화정책연구소 소장) -----	28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	30
● 2부 주제발표 : 대선후보의 문화정책 공약	
발표 1 :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문화정책비전	
발제 - 주성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33
발표 2 : 통합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문화정책비전	
발제 - 양현미 (상명대 교수) -----	37

학술대회 초청의 말씀

12월로 다가온 제 18대 대통령 선거는 다시 한 번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저희 학회는 학계와 정책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문화정책의 미래를 조망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학술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1부에서는 학계에서 그동안 문화정책의 족적을 살펴보고 앞으로 문화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탐색하게 됩니다. 2부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 후보자를 내고 있는 주요 정당의 문화정책 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고, 여기에 대한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학회의 회원들과 타 전문가들, 그리고 관심 있는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한국 문화정책 학회장

정 홍 익(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축사

오늘 "차기정부의 문화정책 비전"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는 한국 문화정책학회에 대하여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국문화정책학회의 창립이후 첫 번째 가을 학술대회에서 시기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다음 정부의 문화정책의 비전을 논하게 된 점은 뜻 깊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화정책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시대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문화국가를 이루는 일, 한류의 흐름을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새로운 창조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일, 예술인 복지에 관한 새로운 출발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일, 문화복지의 완성으로서의 문화여가권의 보장을 법제화하는 일 등 산적한 정책과제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학계와 문화정책분야의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정책의 미래를 조망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오늘 모임에서 모두에게 의미있는 결실을 이끌어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평생을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학문적 정립을 위하여 진력하여 오신 존경하는 정홍익 학회장님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국문화정책학회가 새롭게 출발하면서 앞으로 문화정책의 외연을 든든히 하고 정책의 이론적 학문적 깊이를 더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학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한국 문화정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기초발제를 맡아주신 가톨릭대학교 유진룡 한류대학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참여 전문가님들과 한국문화정책학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 광 무 원장

[발표일정표]

1부 차기정부의 문화정책 과제		
13:30~14:40 - 사 회 : 김 정 수 (한양대 교수)		
개회사	13:30~13:40	- 개 회 사 : 정홍익 (한국문화정책학회 회장)
축 사	13:40~13:50	- 축 사 : 박광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발 제	13:50~14:10	- 기조발제 : 유진룡 (가톨릭대 한류대학원 원장)
토 론	14:10~14:50	- 토 론 : 고정민 (홍익대 교수) 김세훈 (상명대 교수) 김창규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정희섭 (문화정책연구소 소장)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휴식 14 : 50 ~ 15 : 00		
2부 대선후보의 문화정책비전		
15:00~17:30 - 사 회 : 공 유 식 (아주대학교 교수)		
발표 1	15:00~15:20	- 주제발표 : 새누리당 문화정책비전 발제 - 주성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발표 2	15:20~15:40	- 주제발표 : 통합민주당 문화정책비전 발제 - 양현미 (상명대 교수)
토 론	15:40~17:00	- 토 론 : 임학순 (가톨릭대 교수) 유승호 (강원대 교수) 박인배 (세종문화회관 대표) 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 최준호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오양열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석좌연구위원)
질의응답 및 공개토론	17:00~17:30	- 플로어 질의 및 전체 토론
폐회사	17:30	- 폐회 인사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 과제

유진룡(가톨릭대학교 한류대학원장)

1. 현 정부의 문화정책 평가

현 정부는 ‘잘사는 국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2008년 2월 25일 출범하였으며, 2008년10월7일 ‘발전과 통합’이라는 정책기조 아래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5대 국정지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선진화’, ‘창조적 실용주의’라는 국정철학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는 문화정책을 통하여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지원하는 공공서비스는 ‘원칙’과 ‘효율’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도 새로운 성장동력과 접근방식의 발굴로 지속적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비전하에 정책 추진의 4대 목표로 ‘멋있는 한국인 - 창조적 문화예술의 나라’, ‘잘사는 한국인 - 콘텐츠산업으로 부유한 나라’, ‘정겨운 한국인 - 세계인이 다시 찾는 관광의 나라’, ‘신나는 한국인 -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기는 나라’를 제시하였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 추진,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 실용과 효율의 문화행정, 상생하는 문화와 산업, 소통과 개방의 전략, 문화를 통한 녹색성장 등 6대 추진전략을 채택하였다. (2011문화예술정책백서 등, 문화체육관광부)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문화바우처 사업,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사랑티켓 등의 사업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였다. 지난 정부부터 시작했지만 이 정부에서 확대한 학교와 사회 대상 문화예술교육 강화 지원사업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화 창작 지원 측면에서도 명동극장 재개관(2009.6월)과 기무사 터의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2011.12월 착공), 구 서울역사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였다. 경륜경정 수익금의 일부를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등 문화정책 재원을 확충하였으며, 예술인복지법 제정(2011.11.17)을 통해 향후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양적인 성장에 불구하고 현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일반적인 평가는 대단히 인색하다. 이는 원천적으로 정권 초기에 있었던 정치·사회적인 여러 사건들과 편 가르기에 따른 무리한 기관장들의 교체 등을 통해 갈등을 조장하고 주요 정책 관련자들이 일관되지 못한 언행을 보임으로써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비롯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을 새롭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또는 개인적 친소관계로 적절하지 못한 기관장을 임명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고, 이념적 편 가르기를 하면서 정책 수혜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일방적인 집행을 함으로써 반발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 문화정책이 가치의 문제와 무관하게 이루어 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이념의 논리에 매여 진정한 예술 발전의 가능성을 훼손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근본적으로 정부의 정책, 특히 문화정책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추진하면서 정책대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배려하는 과정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큰 것임에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다른 정부의 경우 집권 초반에 각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을 통해 비전을 제시하였던 것에 비해, 세부 분야별로 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하고 전체적인 계획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미래의 큰 그림을 보여 주지 못했다. 또한 자유주의, 실용주의를 추구한다는 명분으로 선택과 집중, 경쟁과 효율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자본과 수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홍보기능의 수단으로서 문화예술을 이용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만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 이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책 담당자들이 문화의 본원적 가치와 부수적 효과 중 어떤 것을 중시하느냐의 태도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할 수 있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야기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공기관 선진화의 명목으로 추진된 기관통합 및 민영화 등의 조치 또한 합당하고 성공적인 것이었으나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형편이다.

경제 위기 극복과 관련해 예술뉴딜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지원 사업은 의미 있는 신규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인 인건비 지원방식을 택함으로써 지원기간중 사회적 기업의 과잉고용과 지원중단시 폐업 및 고용 조정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2010년부터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재정지원으로 성과를 보장할 수 없는 사업 추진의 문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에서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인 다문화사회 관련 정책과 여가정책은 실질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대단히 미진했던 분야라 할 수 있다. 명목적으로 사업항목을 개설하고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지극히 형식적인 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다. 해외 문화교류 분야에서도 재외문화원 및 세종학당의 증설 등 양적인 팽창의 성과가 있었음에 불구하고, 근본적인 정책철학과 방법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K-pop을 비롯해 나타나고 있는 한류 현상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의 시각을 가지고 대하지 못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민간이 해야 할 일까지 들떠서 개입함으로써 자칫 자생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한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다.

2. 새로운 문화정책의 환경과 기본 방향

문화정책의 방향 모색을 위해 정책이 집행될 환경을 살펴보고 정책 수요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 연구기관에서 분석한 중장기 정책환경 예측을 참고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2010. 12월에 국내외 정부 및 연구기관들의 미래 예측을 종합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 <표 1>과 같다.

< 표 1 >

15대 메가트렌드 도출

분야	메가트렌드	내용
S(사회)	인구구조의 변화	세계인구 증가, 국가별·지역별 인구증가/정체/감소가 각각 진행,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양극화	국가 간/기업 간/고용구조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에 따른 교육 기회의 차별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책임 문제 등
	네트워크 사회	사이버 공동체 활성화, 영토국가에서 네트워크 국가로 전환, 정보 독점 및 정보의 평준화 등
T(기술)	가상지능공간	사이버 공간과 물리적 공간 간 상호작용 증대, 증강현실, 실감형 콘텐츠 등
	기술의 융복합화	기술-산업간 융복합화, 전통산업과 신기술의 융합 등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군사용 로봇, 나노로봇, 정서 로봇 등
E(경제)	웰빙/감성/복지 경제	고령화·글로벌화에 따른 삶의 질 중시, 신종 질병/전염병 증가에 따른 건강문제 대두 등
	지식기반경제	경제의 소프트화 현상 심화, 정보·서비스·콘텐츠 등 무형자산 시대 도래, 지식경영 확산, 디지털 중심의 산업 재편 등
	글로벌 인재의 부상	글로벌화에 따른 멀티플레이형 인재, 지식경쟁력 부상, 창의력과 감성의 부각 등
E(환경)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환경오염과 기상이변에 따른 환경안보 부각, 국제 탄소거래제도, 물 부족 문제 등
	에너지 위기	화석에너지 및 자원고갈 심화,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로의 전환, 대체에너지 개발 등
	기술발전에 따른 부작용	인간·윤리문제와 기술의 충돌, 기술 패권주의, 개인정보 보호 및 불건전정보의 부작용 문제 등
P(정치)	글로벌화	이동성 증가, 인력 및 자본 이동, 국제공조 확산, 다문화 및 이종 문화 등
	안전 위험성 증대	신종 질병 및 전염병 확산, 핵 확산, 대량살상무기 확산, 경비산업 성장 등
	남북통합	남북한 경제협력, 북한문제의 국내화 및 급변화, 북한의 불확실성 등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2012년에 기업인 1,000명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한국사회의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한 것들은 <표 2>와 같다.

< 표 2 > 향후 핵심 정책과제

핵심 정책과제	시급성 순위		정책과제별 추진대책 (복수 응답)
	기업인	일반인	
1. 저출산·고령화 완화 및 대응	1	2	① 보육부담 완화 등 출산을 제고(76.1%) ② 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49.6%) ③ 여성·고령 인력 경제활동 참여 제고(39.6%) ④ 건강의료보장 체계 구축(11.9%) ⑤ 부양세대와 피부양 세대간 갈등해소(10.1%)
2. 기후변화 적응·희소자원 확보	공동 4	4	①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75.0%) ② 희소광물 및 식량자원 확보(45.5%) ③ 에너지 절약 및 효율 제고(31.3%) ④ 국제공조 자원협력 강화(19.8%) ⑤ 기후변화 적응 재난방지 인프라 정비(14.9%) ⑥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제도 시행(9.3%)
3. 성장잠재력 확충	공동 4	10	① 산업경쟁력 강화 등 지속성장기반 구축(47.8%) ②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38.1%) ③ 기초·원천연구 역량 강화(35.4%) ④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육성(26.1%) ⑤ 대중소기업 관계구조 개선(22.8%) ⑥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사업화 촉진(14.9%) ⑦ 관광, 의료 등 서비스 산업 선진화(13.1%)
4. 기업의 경쟁력 강화	7	8	①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52.2%) ② 규제완화 등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43.7%) ③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화(28.7%) ④ 창업추진을 통한 신사업 발굴(25.0%) ⑤ 다양한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24.6%) ⑥ 금융 세제 지원 확대(12.7%) ⑦ 사양 한계기업의 퇴출 등 기업 구조조정 촉진(9.3%) ⑧ 인력부족 부문에 대한 외국인 인력수입 확대(1.9%)
5. 일자리 창출	2	1	① 다양한 고용형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54.1%) ②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육성(29.5%) ③ 세제지원 등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26.5%) ④ 공교육 및 직업교육 내실화(24.6%) ⑤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일자리간 차별시정(19%) ⑥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Job-sharing 활성화(17.5%) ⑦ 창업절차 간소화 등 창업활성화(13.1%) ⑧ 구인·구직자 매칭 등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11.6%)
6. 사회적 통합강화	3	3	① 공정경쟁을 통한 계층간 이동성 강화(64.9%) ② 기부, 신뢰문화 조성 등 사회적 자본 확충(33.6%) ③ 누진세제 강화 등 소득격차 완화(30.2%) ④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 확충(23.9%) ⑤ 세대간 갈등 해소(23.5%) ⑥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12.3%) ⑦ 탈북자, 해외동포, 다문화 가족 등의 사회적 융합 제고(9.3%)
7. 국가 간 협력 및 교역 강화	9	9	① FTA 확대 및 활용 강화(64.9%) ② 국제 전문인력 양성(40.7%) ③ 국제논의 참여 확대 및 국제기구 내 역할 제고(31%) ④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28.4%) ⑤ 민간의 국제개발사업 참여 유도(22.8%) ⑥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11.6%)
8. 일과 삶의 양립 기반 구축	8	7	① 유연 근로제도의 확산(69.4%) ② 보육지원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53.4%) ③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49.6%) ④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강화(17.2%) ⑤ 여성친화적 사회기업 육성(7.1%)
9. 정부-민간간 역할 분담과 조직화(거버넌스)	10	6	① 시장-민간정부 간 국가기능의 합리적 재편(58.2%) ② 정부-민간-시민단체 간 정책네트워크 활성화(38.1%) ③ 통합적 위기관리 등 정부의 정책역량 배양(36.6%) ④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향상(31.3%) ⑤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18.7%) ⑥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 제고(14.6%)
10. 글로벌 인재양성	6	5	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시스템 구축(75.0%) ② 기초과학기술분야 등 연구개발투자 확대(52.6%) ③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30.2%) ④ 창의적 인재 활용을 위한 고용구조 개선(27.6%) ⑤ 우수한 해외교육기관(대학 등) 유치(13.1%)
* 5점 척도(①전혀 시급하지 않음 ~ ③보통 ~ ⑤매우 시급)으로 평가한 점수 순			

한편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미래 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연구(연구책임자 정광열, 2011.9월)에서는 <표 3>과 같이 미래의 문화 트렌드를 예측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2012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 분석 및 전망’에서는 <표 4>과 같이 10가지 흐름을 예측하고 있다.

< 표 3 > 미래 문화 트렌드 개요

사회·경제 주요 변화	문화 트렌드	문화 분야 주요 변화
인구구조의 변화(저출산·초고령화 사회 진입) 경제의 변화(창조적 일자리, 근무형태 및 소득증가 등으로 여가시간 확대 및 여가와 노동간 경계 모호)	일상적 삶의 문화화	여성 및 고령층 등 새로운 문화소비층의 등장과 맞춤형 문화정책 수요 증가 문화소비의 개인주의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 수요 증가 일상의 삶에서 문화 소비가 증가하고, 노동/여가, 전문가/비전문가의 경계가 모호
국제 및 인구구성원 변화(글로벌화 및 다문화사회 진입) 문화의 양극화(소득, 일자리, 다문화, 교육 등의 요인)	다문화 및 문화양극화 심화	가족·사회통합과 문화양극화 심화 소득수준이 낮고 다문화 가정이 많은 농어촌과 도시의 격차 및 문화정체성, 창의성의 계층별 고착화 갈등 개방적인 민족문화 개념의 등장
디지털 기술혁신(복용합/디지털화)	문화생산 및 소비의 복용합화	콘텐츠 중심의 개방형 문화생태계 스마트 디지털 문화생활 및 복용합화 소비자 중심의 수평적 패러다임
창조사회 진입 한류의 글로벌화	스마트파워 및 한국문화의 글로벌화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 결합으로 문화콘텐츠 및 창의성 있는 인력의 가치 증가 신한류를 기반으로 한국문화의 글로벌화가 문화·관광·체육 전반 확대

< 표 4 > ‘2012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trend) 분석 및 전망

1. 케이팝(K-POP), 누리소통망(SNS)과 유튜브(You tube)를 타고 신한류를 이끈다
2. TV, 바보상자에서 뜨거운 문화 생산자로 진화한다
3. 가족 여가의 새로운 발견 문화예술로 함께 즐긴다
4. 예술 장르의 옷을 벗고 융복합(convergence)으로 무한 번산한다
5. 예술로 사회를 치유한다
6. 불안한 미래의 예술창작자 자립에서 길을 찾다
7. 소수 문화의 힘이 문화예술의 주류를 이끈다
8. 소셜미디어로 말하고 소셜미디어로 창조한다
9. 문화예술 낯은 도시에 매력을 입힌다
10. 이제 환경 운동은 문화예술로 한다

이상과 같이 여러 기관에서 분석 예측한 내용을 종합하여 나름대로 앞으로 문화정책이 수립 집행될 환경과 그에 대응하는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정책은 향후 ‘문화’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OECD 국가 중 가장 긴 시간 노동을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반면에 낮은 노동생산성과 낮은 행복수준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대안 마련을 위한 요구는 점점 커지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현재 안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며, 인구 구조와 사회 변화에 따라 복지 논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경제정책 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이며, 국민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생애 전반에 걸친 ‘여가정책’의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앞으로 국민의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문화예술을 비롯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생애주기에 따라 단계별 맞춤형으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제구조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맞이하게 된 ‘일 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대책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 가정과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는 단순히 소극적인 복지 차원에서의 과제뿐만 아니라 저출산 사회와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과제에 해당된다. 이는 사회통합 등 정서적, 사회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또한 문화 분야에서, 그리고 문화를 통해 여성, 노인, 장애인 등 계층별, 세대별, 지역별 격차를 완화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일은 앞으로 더욱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될 것이다. 더욱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 세계 경기의 침체로 인한 경제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과제는 더욱 큰 의미를 갖게 된다.

IT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smart, ubiquitous 환경에서 융복합의 추세는 우리 삶의 조건에 영향을 주게 되며, 문화 영역에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문화예술의 창조와 수용의 방식이 달라질 것이며 정책적으로 이를 주도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방해(저지?)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입장 정리,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세계화의 흐름이 빨라지는 현상도 불가피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화적 정체성과 보편성의 문제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한류라 불리는 대중문화를 비롯해 한국문화의 해외 소개와 문화교류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민간과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 입장을 다시 정해야 할 것이다.

현 정부 집권 이후 여러 요인들로 인해 중단되어 있는 남북교류는 새로운 정부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체제 속에 살고 있는 같은 민족 사이의 동질성과 이질성의 확인, 이해, 회복 등을 위한 다양한 대책과 함께, 언젠가 - 빠른 시일 내 이든 아니든 - 올 수 있는 남북의 통일 상황에 대비한 정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앞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은 모든 정책 분야에서 핵심적인 영향요소가 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정책 또한 ‘녹색을 띤 성장’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수립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새롭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 뿐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일의 존치 여부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 여부까지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지속가능성’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3. 문화정책 주요 과제

이러한 정책 환경과 수요를 고려하고,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감안하여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주요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1) 공동체의 가치 모색을 위한 정책

정부는 궁극적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 모든 정책이 그렇듯이 문화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아름다움과 창의성 등 다양한 목표는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복’을 이룰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행복하지 못한 우리 사회를 치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경제적 수단으로만 가능한 것이 당연히 아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로서 문화적 수단이 중요하고 유효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문화정책은 수단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가치 때문에 귀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화정책은 화려하고 잡다한 형식과 명분, 이념 갈등으로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 좁은 의미의 문화적 가치 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공동체의 가치에 대해 논의의 장을 열어 주고 활발한 토론과 정리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다른 어떤 부처도 할 수 없는 일을 문화부만이 정책 차원에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에는 ‘한국학’에 대한 총체적 진흥정책과 이를 통한 문화정체성 확립 또한 목표로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학 연구와 교류, 확산은 문화정체성의 확립하고 자긍심을 높여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화 과정에서 한국의 위상 정립과 산업적인 활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에 분산·중복되어 있는 관련 기능을 전면 재조정하고 문화부를 중심으로 종합적 진흥정책체계를 갖추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보편적 복지 차원의 여가정책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는 모두 여가의 영역에 해당된다. 순수 문화예술, 엔터테인먼트산업, 관광, 체육과 종교까지도 활동과 산업 측면에서 여가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가’ 관련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고 종합하는 개념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융복합을 지향하는 정책환경 속에서 여가정책을 통해 모든 분야의 ‘수용(향수)자 대상 정책’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

앞으로의 사회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여가’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가는 단순히 쉬고 노는 행위 이상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 균형있는 삶을 통한 행복 추구의 수단으로 뿐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배려와 나눔 등 가치의 공유를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 등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강요되고 있는 ‘아침형 인간’의 행태와 지나친 경쟁의 조장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여가산업 자체가 무한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고 커다란 고용 유발효과를 가진 고도 서비스산업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가정책은 향후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빈부와 지역, 계층의 차이에 상관없이 향유될 수 있어야 하며, 단기적·장기적으로 양극화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강화되어야 한다.

여가정책의 추진에는 앞서 강조한 가치의 문제까지 포함된다. 단순히 쉬고 노는 행위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느낌과 여유, 나눔과 공존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작업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각 분야 ‘문화 나눔’과 ‘바우처’ 사업 등의 대상과 예산을 재조정하고 도덕적 해이가 없도록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역별로 주민들의 여가를 기획·조정·지도해 줄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서 ‘여가관리사’의 배치제도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국의 Leisure Manager제도 참고)

3) 통일 대비 문화예술정책

현 정부 출범 이후 중단되어 있는 남북 교류는 많은 장애요인에 불구하고 재개되어야 하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후 적절한 시기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류 중단 이전에도 남북의 문화교류는 주로 민간사업자에 의해 단편적으로 추진되어 질적인 발전이 없었고, 장기적으로 통일에 대비한 문화정책 차원의 준비는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제 남북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준비를 넘어서 통일 이후 ‘남북 문화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되었다. 2007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 정상회담의 문화예술학술분야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들과, 2007. 11.16, 남북한 총리 회담 합의문 중 사회문화분야 교류 협력 내용(제4조)의 이행 여부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교류·협력사업 또한 추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4) 문화적 다양성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등 다문화 사회로의 빠른 변화와 북한 이탈 주민의 문제 등은 복지과 사회 통합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미래 성장 인력의 양성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대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현재 다문화정책의 경우 결혼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 과잉·중복 지원의 문제와 교육·상담 등 정착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형식적 대처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한 북한 이탈 주민의 경우 아직까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어떤 경우든 점점 많은 수가 될 것임에 비해 정부의 체계적인 정착 지원대책은 빈약한 상황이다. 기본 생활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지만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문화의 차이 극복과 교육의 문제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다문화 및 북한이탈 주민의 문제는 복지정책과 별도로 문화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문화 다양성과 국가 통일성이 균형을 이루며 상호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고려는 다문화 및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 뿐 아니라 국제문화교류 정책의 추진에도 해당되어야 한다. 대중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류의 인기에 편승하여 정부가 나서서 이를 지원하는 것은 해당 국가들의 오해를 사고 반발하게 만들 수

있다. 정부는 해외에서 인기 있는 문화의 확산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간접 지원하는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는 지금까지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노력을 지속하되, 각 지역별 국가별로 선호하는 분야에 대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전략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종종 그리하듯이 자화자찬하는 낭비적인 일방적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여야 한다. 정부가 오히려 다양한 외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입·소개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일방적인 문화 진출이라는 오해를 피하고 교류기반을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문화적 가치의 확산 정책

지역별로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가의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표는 문화정책의 측면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균형 발전’과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의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두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정책은 ‘문화예술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과 주민의식의 변화, 그리고 ‘공공미술의 확산’을 통한 지역 발전 및 문화적 재개발이 될 수 있다.

문화예술 교육은 단순히 기술의 전수가 아니라 교육과정을 통해 갖게 되는 문화적 체험과 의식의 변화, 공동체 형성 등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교육은 개인과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확대되어야 한다.

넓은 의미의 공공미술은 예술의 아름다운 가치를 사회 전반에 심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단순히 디자인 측면에서의 조정활동 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공동체의 의식과 행태에 까지도 영향을 주는 정책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의 많은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도 발전이 지속되면서 과거 무계획하게 조성되었던 도심과 용도변경 건축물의 재개발 등을 위해 문화적 관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와 함께 새로운 지역의 조성에도 처음부터 문화적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조각학회 학술대회(2012. 10.12)에서 강원대 유승호교수 외 2명이 제안한 1930년대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문화부문 뉴딜정책인 PWAP(Public Works of Art Project)의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능력 있는 예술가들로 하여금 공공건물을 창의적으로 꾸미는 일을 의뢰함으로써 도시를 문화적으로 바꾸는 한편 예술가들의 일자리를 제공했던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세종시와 같은 신도시를 조성할 때 지금이라도 PWAP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면 세계적으로 특색 있는 도시의 탄생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작업을 담당했던 예술가들이 자신이 작업한 도시에 자리 잡고 살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창의적인 문화예술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게 될 것이다.

4. 정책 추진 전략

1) 정책 거버넌스의 확대 구축

문화의 영역은 이제 좁은 의미에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구현되어야 할 가치의 문제가 되었다. 또한 문화정책의 목표가 되는 사회통합과 양극화 극복,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등을 비롯한 여가와 복지의 문제들은 단일 분야의 과제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서 해결도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융·복합하는 방식을 통해야만 하게 되었다. 실제로 지금까지 부처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들로서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교육과학부), 군·교정시설·소년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국방부, 법무부), 청소년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여성가족부) 등이 있으며, 문화콘텐츠, 관광, 체육 등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함으로써 더욱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이는 각 부처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 소속 KOTRA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KOCCA 및 한국관광공사 등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과거 국가 주도 개발단계의 상황과 달리 민간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자원동원 능력이 이제는 정부 부처가 가지고 있는 것 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이 있다. 이제 정부는 지극히 형식적인 규모에 불과할 수 있는 보조금을 가지고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정부의 보조금은 정부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민간에 알려주는 상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문화정책의 경우 특히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작은 규모의 보조금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규모 보다는 정책 수혜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정부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정부의 실패 가능성 또한 스스로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민간부문에서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원하는 일들 - 가령, 환경 조성 및 공정한 규칙의 감독자 역할 -을 생색내지 말고 해주는 겸허한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가장 변하지 않는 대표적인 조직인 정부가 민간분야의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 이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며, 앞장서서 장애물을 치우고, 스스로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빨리 비켜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2) 문화 재정의 확충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보고서(OECD 주요 국가의 문화예산 비교 연구, 2011.6월)에 의하면 2008년 기준 한국 중앙정부의 문화예산 비율은 1.54%(27개국 중 13위)로 OECD 평균값인 1.84% 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또한 2000~2009년 동안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문화예산 비율의 평균값은 0.68%로 OECD 28개국 평균인 1.21%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28개국 중 24위)으로 나타나고 있다. GDP 대비 중앙정부 문화예산의 평균값 역시 2008년 기준 0.32%로 27개국 평균인 0.53%에 비해 낮게 나타남으로써(27개국 중 23위) 한국의 경제적 규모에 비해 문화부문의 정부 지출이 아직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문화예산의 절대규모에 있어서도 한국은 35억 달러로 프랑스의 약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국가의 인구 규모를 고려한 1인당 문화예산의 규모 역시 프랑스의 1/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문화의 세기에 대비하여 문화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정부예산의 최소한 2%를, 장기적으로는 3% 확보를 목표로 재정을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문화행정 조직의 개편

이상과 같이 새로운 문화정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부의 조직은 문화적 가치의 확산 측면에서 뿐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탄력적이고 융복합적인 조직의 운영이 필요하다. 좁은 의미의 문화분야 정책과 함께 문화콘텐츠정책, 관광 및 체육정책은 여가복지 정책의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 대안으로 융복합되어 운용될 수 있어야 더욱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CPND의 통합 필요성과 관련해 가장 핵심이 되는 디지털 콘텐츠가 기초가 되는 아날로그 콘텐츠와 분리될 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 표 5 >에서와 같이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참조해 볼 때 프랑스의 ‘문화통신부’ 또는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같은 형태의 조직으로 적극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

< 표 6 >

주요국의 문화산업정책 추진조직체계 비교

국가	중앙부처	주요공공기관
프랑스	문화통신부(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국립영화진흥센터(CNC) 영화 및 시청각 산업자금출자회사(SOFICA: Sociétés de Financement et de l'Industrie Cinématographique et Audiovisuelle) 프랑스문화원(Centre Culturel Français)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	영화진흥위원회(The Film Council) 디자인진흥원(The Design Council) 국립복권위원회(National Lottery Charities Board) 잉글랜드예술진흥원(ACE) 공예진흥원(The Crafts Council)
일본	문화청(저작권, 미디어아트, 문화교류) 경제산업성 미디어콘텐츠과(상무정보정책국 문화정보관련 산업과) 외무성	일본예술문화진흥회 일본디지털콘텐츠협회 일본문화원(Japan Foundation)
호주	통신정보기술예술부(DCITA : Dept. of Communic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Arts)	호주문화예술진흥원(Australia Council of the Arts) 호주영화위원회(Australian Film Commission) 방송위원회(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캐나다	문화부(Dept. of Canadian Heritage)	텔레필름캐나다(Telefilm Canada) 캐나다국립영화제작소(National Film Board of Canada)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통신위원회(CRTC : Canadian Radio-television & Telecommunication)
중국	문화부 국가방송영화총국	북경대학문화산업연구소 청화대학문화산업연구센터
미국	16개부처가 문화예술 지원프로그램 실시	미국국립예술기금(NEA: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미국영화협회(AFI: American Film Institute)

(출처 : 문광부, 문화콘텐츠진흥원, CT비전 및 중장기 전략수립, 2005년)

5. 맺음말

새로운 정부에서는 ‘행복사회’, ‘창조사회’, ‘균형 있는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 복지 차원의 문화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 모든 정부 정책이 그렇듯이 - 기본적으로 정책 대상자들의 신뢰를 얻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혁신(Innovation)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에서, 그리고 조직이 정책환경과 얼마나 성공적으로 소통하고 신뢰를 얻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된다. 하지만 매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듯이 편 가르기에 의한 무리한 기관장 교체와 지원기준의 편향적 변경 등이 나타난다면 특히 문화정책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게 된다. 국민통합을 지향한다면 편 가르기와 갈등 조장에 앞장 서는 정권을 신뢰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서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보다 다양한 문화가 병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문화정책이 모범을 보여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지켜주되, 철저하게 능력 위주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옥석을 가려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참고 문헌 >

- 문화체육관광부. (2012). 「2011년 문화예술정책 백서」.
-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005). 「CT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2012 문화예술의 새로운 흐름 분석 및 전망」.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과제와 방향」.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1). 「OECD 주요국가의 문화예산 비교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0).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 한국정보화진흥원. (2010). 「한국사회의 15대 메가트렌드」.
-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 (2012). 「중장기보고서 정책과제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토론문]

차기정부 문화예술정책 과제

고정민 (한국창조산업연구소 소장,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1. 일반인의 문화리터러시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정책

최근 문화예술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바우처 사업, 다문화 계층을 위한 사업 등 현 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문화예술정책백서, 2011). 장애물없는 문화시설 만들거나 다문화 이해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와 지역적, 경제적으로 문화향유기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서민들을 위한 문화정책을 강화하여 중소기업 근로자나 전통시장 상인 등과 같은 계층의 문화활동 활성화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저소득이나 다문화가정들은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소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이 문화향유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이나 부유층 중에서도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리터러시)가 부족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즉,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자금상의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에 대한 리터러시의 부족으로 인해 소비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고 있지 못한다. '벌어먹기도 바쁘데 왜 문화예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문화적 차원에서의 사회취약계층 위주의 정책은 수혜대상자의 수요와 정책 공급이 미스매치가 된, 즉 펀트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은 정책 대상으로 볼 때 일반인들의 문화에 대한 리터러시 증진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즉, 중산층과 같이 문화예술 소비에 대한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나, 이해 부족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리터러시 교육과 문화예술체험 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면, 문화예술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문화예술 공급 작품의 판로와 문화예술시장의 확대로 연결되어 선순환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소비와 공급이 모두 윈윈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은 재정적인 복지나 일자리 창출과 같은 재정적, 성장산업 발굴, 일자리 창출 등과 같은 경제적 차원이나 경제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2. 국민의 창의성을 높이는 문화예술정책

미래는 창조경제의 시대이다. 창의성과 상상력이 경제사회의 기반이 되고, 창의성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이른바 창조경제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창조경제시대에는 창의성을 가진자와 그렇지 않은자의 차이가 극명해지면서 창의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노력이 화두가 될 것이다.

그런데 문화예술은 창의성을 확보하고 배양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된다. 즉, 문화예술작품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는 많은 창의성이 필요하다.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학습자의 문화적 감수성 발달과 창조적 사고력을 향상시키고 개인의 역량을 계발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문화와 예술은 학습자의 창조적 경험, 창조적 과정, 창조적 발전에 활발히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확장된 교육으로써 예술교육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계발할 수 없는 독특한 관점을 다양한 영역에서 발달시킬 수 있다. 이러한 창의성을 문화예술을 통해 확보한다면 미래 창조경제시대의 중요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이미 선진국의 경우에는 미래시대 선취를 위한 창의성, 창조교육이 활발하다. 영국은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정부가 앞장서 창조교육을 위한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다. 지금은 예산상의 이유로 보류된 상태이지만 영국의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 프로젝트(Creative Partnerships project)는 대표적인 창의성 교육 프로그램이고, 독일, 프랑스, 미국, 핀란드, 캐나다 등 세계 선진국에서는 창의성교육을 위한 연구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문화예술을 통한 창의성 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창의성연구와 교육 방식의 도입과 함께, 창의성교육의 교육방법론에 대한 연구와 창의성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에 이미 개발된 창의성교육의 재검토 및 보완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방법론의 정립이 요구된다.

3. SNS 등 소셜미디어의 발달에 따른 문화예술 정책 수단의 변화

스마트폰과 SNS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SNS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한 새로운 ‘문화예술의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스마트기반의 매체를 활용하여 문화예술의 창작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창작과 소비가 동시에 발생한다. 이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소셜미디어아트와 모바일 아트가 출현하고, 또한 SNS를 통해 예술가들이 대중들과 직접 소통하며 문화예술 창작물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예술정책도 이러한 스마트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자가 공급자가 되는 환경에서는 일반인들의 문화예술공급을 위한 인프라, 모바일 환경에서 문화예술 작품들이 유통되는 마켓플레이스, 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커뮤니티 구축 등과 같은 모바일이나 인터넷 문화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아울러 지금까지 오프라인에서 시행되던 각종 사업과 콘텐츠를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앱 등을 정부차원에서 개발하여 제공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이나 인터넷 상에서 최적으로 구현되는 차별화된 문화예술작품을 제작하는 사업에 정부가 지원을 함으로써 스마트 강국으로서 스마트 문화예술 작품 선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나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SNS를 활용할 수 있다. 즉, 문화예술 분야의 열악한 일자리 현실과 직업안정성에 대한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자립’에서 찾는 예술인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는 환경에서 소셜 펀딩(social funding)을 통해 창작자와 예술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21세기 지식전달체계는 SNS의 발달로 일방향적 소통에서 쌍방향 소통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식전달자와 수용자 사이의 경계가 사라지며 학습자와 교육자의 구분이 무의미하다. 따라서 문화예술 교육차원에서도 SNS와 인터넷 등 온라인상과 동호회와 같이 오프라인이 상호 연결되어 일반대중들이 상호적으로 교육 및 지식을 전달을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발적 문화의 형성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론문]

차기정부의 문화정책과제 토론문

김세훈 (상명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

위 원고는 크게 향후 문화정책의 방향, 과제, 추진전략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원고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전반에 대해 토론자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이라든지, 지속가능성을 띤 문화정책의 필요성, 융복합 추세와 문화적 정체성/보편성에 대한 대응 등은 문화정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영역들이다.

토론자는 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지려면 문화정책 영역에서 몇 가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그 가운데 중요한 몇 가지를 아래에 적어보았다.

첫째, 문화정책에 대한 확장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정책과 관광, 체육 정책 등을 제외하고라도, 문화정책은 그동안 예술정책의 부수적 영역으로 그 위상이 자리매김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문화향수는 예술향유의 국민적 확대라는 차원에서 접근되고, 문화정책 영역에서 사업규모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나 문화바우처 등 사업들은 이러한 맥락에 위치해 있다. 다문화나 고령사회 등에 대한 문화정책적 대응 또한 예술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주로 다루어

지고 있다. 원고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한국국학진흥원, 국사편찬위원회 등을 문화정책 영역에서 논의하자고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문화정책에 대한 보다 확장된 이해를 전제하지 않고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인력과 관련된 문제이다. 문화정책 영역에서의 실질적 거버넌스, 민간의 의견을 경청할 수 있는 태도 등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순환보직제로 인한 업무의 비연속성은 다방면의 전문성을 폭넓게 획득하기는 용이할지 몰라도, 특정 영역에 대한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하게 되는 경우를 초래한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이해가 미흡한 담당자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순환보직에 따라 자리를 이동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이나 문화적 균형발전은 이와 같은 인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요원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직에 문화 직렬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해보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문화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이다. 공공서비스가 국민에게 골고루 전달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전달체계가 잘 만들어져 작동될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부에서 수립, 시행되는 다양한 정책 및 사업들은 ‘과’ 중심의 전달체계를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예컨대 지역문화과는 지방문화원을, 공연전통예술과는 한국문예회관연합회를, 문화예술교육과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통해 서비스하는 것이 그것이다. 업무의 성격상 각 분야의 특정 기관들을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일지라도, 수요자/향유자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할 수가 있다. 실제로 지역 주민들은 특정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어떤 기관을 찾아가야 하는지 또는 어떤 서비스가 어떤 기관을 통해 전달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

해서, 공공문화서비스가 ‘아는 사람만 찾는’ 서비스로 제한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서비스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비해 서비스 전달체계는 아직까지 통합적으로 구축되지 못하여, 그때 그때 사업에 따라 전달기관을 선정하고 운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국민들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는 문화분야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토론문]

차기정부의 문화정책 과제 :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김창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전통과 현대의 결합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 우리는 과거의 문화원형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양식을 ‘모던 오리엔탈’이라 부른다. 2007년 파리 이상봉의 한글 디자인 패션쇼가 큰 주목을 받았다. 한글을 변형시킨 디자인이 세계인의 감수성을 자극한 것이다. 최근에는 전통한옥의 정갈하고 소박하며 기품이 넘치는 느낌과 친환경적인 구조적 장점이 아파트 주거공간에 접목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대건설업체들이 전통한옥양식 중 하나인 내루(內壘)와 원(園)의 개념을 아파트에 결합시키고 있다. 작은 공간으로 있는 아파트의 베란다를 한옥의 내루로 다시 되돌려 차를 마시는 다실이나 아이들의 놀이터로 활용하고, 일정한 규모를 갖춘 양반가의 폐쇄된 담장 안에서나 존재했던 정원이 아파트라는 공동체의 열린 공간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다. 한옥의 내부처럼 꾸민 병원의 진료실, 서까래와 적벽돌로 조화를 이룬 와인바 등 전통주거양식을 현대화시키려는 시도들은 지금 우리 주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 동안 전통문화의 보호정책은 엄격한 원형보존, 즉 원래의 양식을 변형시키지 말 것을 강조하여 왔다. 그러나 전통을 현대화시켜 대중을 설득하는 것, 즉 ‘모던 오리엔탈’이 지금 시대의 황금 금맥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무관심 속에 놓여 있던 새로운 한국적 문화자원의 재발견과 함께 전통기능의 현대적 전승과 활용, 지역축제의 문화적 가치 제고, 전통문화전문인력의 고급화, 문화재행정조직체계의 효율화 등을 요구한다.

한국적 문화자원의 재발견

한국적 문화자원의 재발견을 위해서는 전통문화의 보호대상범위를 개별 문화재 뿐만 아니라 개별 문화재 상호간 또는 문화재 유형 상호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일정한 가치를 갖는 것, 더 나아가 문화재의 주변환경과의 관계에서 일체성, 문화적 경관을 형성하는 것까지 확대해 나아가야 한다. 예컨대, 근대 및 현대문화재는 개개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이 서로 관련성을 가지면서 시스템 전체로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예로서 광산시설의 경우 사무소, 갱도, 기계, 발전소, 광산철도, 주택, 매점, 학교, 내부설비(철도·자동차·증기기관 등) 등을 일괄로 보호대상화하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 추가하여 주변의 문화환경과 생활사문화까지 포괄하여 보호대상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전통문화보호대상범위의 시기를 종전 전통농경사회 뿐만 아니라 근대·현대사회까지 확장하여 근대 과학·산업유산, 근대 이후 당시의 사회나 생활기록으로서 역사적으로 귀중한 영상·음반·녹음물 등의 기록유산을 포함시키고, 우리 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생활예술(다례·꽃꽂이·예법 등)과 생활문화(어로기술·전통무예·어린이놀이문화 등)를 포함시켜 현행 보호방법과 다른 별개의 보호방법으로 전승·보존하고, 인간의 어리석음이나 잔혹함을 상징하는 마이너스유산(일제치하의 수용소·대학살장) 및 문화적 경관(특히 일상적인 풍경으로서 농촌·산촌·어촌경관 등)의 보호와 이를 활용, 지역사회와 밀착된 이야기테마파크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생활예술 및 생활문화의 발굴과 전승, 문화적 경관의 보호는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생활예술로서 자리잡고 있는 다례, 꽃꽂이 등은 우리의 삶과 밀착되어 발전을 거듭하면서 예술의 영역으

로 승화되어 왔다. 그리고 오랜 성장과정에서 몇 개의 유파로 분리·발전되어 왔다. 이들 생활예술은 쇠진·소멸의 위기에 처한 것은 아니나, 우리 삶과 전통생활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어서 체계적 보호와 육성이 필요하다. 정규의 학교교육과정에 우리의 생활예술교육을 포함시켜 발전시키고, 생활예술 전승자들이 정규 학교교육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생활문화는 우리들 삶속에 형성·발전되어온 것들로서 지역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지역의 환경에 바탕을 두고 발전되어온 어로기술, 민간에 전승되어오는 어린이 놀이 등이 그것이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민속자료로 지정·보호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엄격한 ‘지정제도’ 하에서 박제화된 원형유지 및 전승에 머물고 있어 지금의 보호방법으로는 그 창조적 전승이 불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보다 완화된 유연한 방법으로 지역민의 삶에 뿌리내리고 확산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며, 그 가운데 가치가 큰 생활문화는 국가차원에서 전국단위로 보급·육성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지역민의 생활·생업 및 당해 지역의 풍토에 의하여 형성된 경관지 중 우리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생업의 특색을 표시하는 전형적이거나 독자적인 문화경관도 새롭게 조망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남해 가천마을 다랑이논과 같이 그 일부는 이미 ‘명승’으로 지정·보호되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 생활경관인 산촌경관, 어촌경관, 농촌경관의 보존과 활용은 여전히 미약하다.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일상 생활경관의 보호와 활용방법을 개발하고, 이를 외국인 과 도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외부인은 당해 지역의 문화를 체험·공유하고, 지역민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의 바탕이 되는 전통기능의 현대적 전승과 활용

현대 지식정보화사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하여 미래학자들은 감성의 시대로 나아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미래 사회는 아마도 문화가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문화산업이 경제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문화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문화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전통문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한국인의 삶과 정서가 반영된 문화콘텐츠의 수출은 상품 자체의 판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 자체를 좋아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에게는 물질문화를 추구하는 서구사회와 달리 풍부하고 다양한 무형의 문화자산과 전통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전통기능을 전승하여 현대사회에 맞도록 재창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현행 전통기능의 전승교육은 보유자, 이른바 인간문화재가 자신의 공방 또는 전수관을 통하여 수행하고 있다. 국가는 전통기능의 전승교육을 위하여 전승지원금과 전수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재 종목 중 경제적으로 각광받는 분야는 전승자가 많으나, 경제적으로 각광을 받지 못하는 분야는 전승하고자 하는 자가 없어 우리의 전통기술이 단절될 위기다. 또한 국가의 전승자 교육을 위한 전수관 건립 및 지원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전수관 건립 이후 운영자금의 지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수관 운영의 전문성이 떨어져 국가 예산 지원의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보유자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에 의한 전승자 교육은 정통성이 부여되지 않으므로 법정의 전문교육기관에 의한 전통기능의 전승이 불가능하며, 보유자의 직접 교육 내지 운영은 전통기능의 원형유지에 머물고 있어 전통기능의 창조적 계승·발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한국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의 원동력이 되는 우리의 전통기능을 보존하고,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승교육제도를 개편하여 최소한 단절되어 가는 전통기능의 전수교육이라

도 전문교육기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절되어 가는 전통기능 종목의 보유자를 전문교육기관의 강사로 활용하여 전승자를 양성하고, 보유자와 전승자가 실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공방을 전문교육기관 내에 설치하여 이들의 전수교육현장을 주말 마다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문화체험공간으로 활용하며, 보유자와 전승자가 제작하는 전통원형의 전통공예품 뿐만 아니라 문화상품의 창조적 계승·발전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전통기능의 현대화를 도모하고, 국가의 경영역량을 동원하여 보유자와 전승자가 생산한 작품 및 공예품의 안정적 유통체계를 확립·보급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전통기능의 전승과 재창조를 위해서는 전승자의 저변확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기능의 전승이 초등학교 및 중등학교 교육과 연계되어야 한다.

지역축제의 문화적 가치 제고

한국의 5월은 지역축제의 계절이다. 이러한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지역적 공감대와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과 지역의 교류를 촉진시키는 촉매제로서 다른 지역민들과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지역축제에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반영되어야 하고, 그 지역역사의 상징이며 지역문화발전의 원동력인 지방문화재가 활용되어야 한다. 지역축제의 관광객이나 방문자들은 종래 책이나 영화를 통하여 이미 익숙해져 있는 그 지역의 물질적 외관을 현지에서 확인하고 약간의 감동을 경험한 채, 돌아와서 여행을 했다는 포만감에 사로잡히는 정도에 만족하였으나, 이제는 그 지역의 진정한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고자 한다. 따라서 지역축제를 계획하고 집행하는 자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와 문화의 의미를 알기 쉽게 해석하여 지역축제 및 문화관광프로그램에 적용함으로써 관광객이나 방문자가 그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축제의 문화관광자원화는 단순히 관광자원으로서 볼거리를 제공함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질 때에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문화와 지방문화재에 관한 조사와 관계 자료의 철저한 수집·정리·분석이 필요하다. 이 경우 지방문화재 이외에도 지역의 인물, 정신, 학문, 민속, 인심, 특산물, 토속음식, 자연경관, 레저공간(전원, 휴양림, 낚시터) 등의 문화적·자연적 환경자원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들의 분석과정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특수한 형성조건과 배경, 지역성이 규명되게 되고, 더 나아가 이에 바탕을 둔 지역문화발전의 비전, 복원, 미래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축제의 프로그램개발은 수요층의 요구와 수준에 맞춘 차별성이 필요하다. 수요층의 수준이나 기호에 맞추어 지역축제의 프로그램은 교육형, 관람형, 체험형, 레저형, 복합형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지역문화상품 등과의 연계성도 고려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축제의 프로그램개발은 지역민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지역축제의 문화관광자원화가 단순히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라는 인식이나 특정한 일부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역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이자 스스로의 삶의 수준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동안 한국의 지역축제는 축제가 가지는 문화적 가치 보다 축제의 관광자원화를 강조함으로써 그 지역의 정체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우후죽순처럼 생성되어 성행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축제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 지역문화와 문화재관리 전

문인력의 참여가 배제된 채, 비전문가인 이벤트기획사가 전담해온 사실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지역축제가 그 지역의 문화를 전승·재창조하고, 다른 지역과의 독자성·차별성을 도모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역축제의 계획 및 집행과정에 지역문화 및 문화재관리 전문인력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되어야 한다.

전통문화전문인력의 고급화

21세기 문화트렌드인 ‘모던 오리엔탈’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전통문화교육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전통문화의 원형을 찾고, 그 원형을 재창조하여 활용할 수 있는 심화된 교육과정으로서 석·박사과정의 대학원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과정은 그렇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그나마 올해 2012년 7월부터 전통문화교육의 요람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석·박사과정의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다행스럽다. 이와 아울러 ‘모던 오리엔탈’의 성장과 발전의 바탕이 되는 문화재의 파수꾼, 전문자격자의 배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문화재관리사라는 새로운 국가자격제도의 신설이 기대된다. 문화재관리사는 전통문화의 원형을 발굴하고, 재창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문화재행정조직체계의 효율화

문화재보호정책은 문화재의 발굴·연구, 문화재의 보수·복원·정비·관리, 문화재의 공개·전시·활용 등에 이르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며 유기적으로 형성될 때에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정책은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문화재관계 행정기관이 기능별로 분화되어 있어 조사·연구, 보존처리, 문화재데이터베이스구축 등이 기관별로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직원과 전문지식의 상호교류도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것은 문화재 전시·교육과 전통문화의 홍보 등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의 소속이 문화재청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더 나아가 21세기 문화국가시대에 있어서는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반영한 CT산업의 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전통문화를 현대적 감각에 맞추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에 전통문화 콘텐츠의 원형을 이루는 무형문화재의 전승과 발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청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의 문화상품 및 관광상품화에 관한 집행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어 21세기 문화재 행정수요에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재보호정책기관의 일원화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문화재의 가치 재창조와 그 활용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재 보존 및 활용업무를 문화재계의 단위에서 수행함으로써 문화재업무의 중요성과 독자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문화공보실 소속하의 문화관광계가 홍보·선전·문화·관광·체육업무 등과 함께 문화재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인사이동 또한 잦음으로 인하여 문화재행정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문화재전담부서의 신설과 문화재관리전문인력의 배치 의무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문화재 보존 및 활용정책기관의 일원화를 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재 전담부서의 설치와 전문인력의 배치를 법정화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문화재의 지정·보존과 전시·교육 및 유물관리기능 등에 있어서 일관성 있고, 효율적인 문화재관리를 위

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 소속되어 있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을 문화재청 산하의 기관으로 재편함과 동시에 전통문화컨텐츠개발과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전통문화의 콘텐츠개발·촉진 및 문화상품·관광상품화에 관한 업무를 문화재청으로 일원화하도록 조직체계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 및 활용 전담부서와 전문인력의 배치를 법정화하여야 한다.

[토론문]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향한 문화정책의 모색

정희섭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

1. 현정부 문화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새로운 문화정책의 환경과 방향, 문화정책의 주요 과제와 추진전략 등에 대한 발표자의 폭 넓고도 핵심적인 발표 내용을 경청했습니다. 오랜 동안 문화정책의 일선에서 폭 넓은 경험과 역량을 쌓아 온 발표자의 내공에서 나온 진단과 제안이기에 개인적으로 좋은 공부가 되었으며, 향후 문화정책에도 중요한 참고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정책은 수단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형식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가치 때문에 귀중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화정책은 화려하고 잡다한 형식과 명분, 이념 갈등으로 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은 향후 어떤 성격의 정부가 들어서든지 유념해야 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오늘의 토론은 현정부 문화정책에 대한 진단보다는 차기 정부 문화정책의 과제를 짚어 보는 것에 중점이 있을 것입니다. 발표자가 현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점들을 간결하게 잘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짚어 주셨으므로 토론자로서 조금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한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 정책과 집행에 대한 일종의 거버넌스 체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안-설립된 것입니다. 그러나 토론자가 보기에 현정부는 기관장의 강제교체라는 무리를 범하면서까지 예술위에 개입했으면서도, 막상 예술위에 대해 무시-기능약화로 일관해 온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예전 진흥원 시절보다 예술위의 위상과 역할은 더 축소되고 그 자율성은 커녕 존재 자체가 무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대학로에 있던 예술위 사무실을 ‘예술가의집’으로 조성하면서 구로동의 임시 청사로 이전하게 한 것은 현정부가 예술위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위의 기능과 재산을 일부 떼어 내어 한국공연예술지원센터(HANPAC)와 국립예술자료원을 설립했습니다. 이에 비해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근거를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에 마련하였으며 사단법인으로 있던 한국문화예술포럼연합회(한문연)도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 그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예술위는 불필요한 기관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문화부 내에서 떠돌아다닌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예술위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그 역할과 기능을 다른 기관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까지 이전시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발표자가 2기 예술위 위원을 역임하셨으므로 남다른 소회도 있으실 터이니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에서는 예술위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 보고 싶습니다.

2-2. 또한 예술경영지원센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등은 사실상 문화부의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들이지만, 문화부 사업의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원받는 사업비를 떼어 운영비로 전용하는 등 편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문화산업/체육/관광 등 문화부 산하에 이런 식의 기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차기 정부의 문화부가 이들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운

영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3.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부 출신 4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 2주"라고 밝혔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난 9월 현재까지 문화부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과 임직원의 재취업사례 98건을 분석한 결과, 퇴직공무원 84명 중 60.7%에 해당하는 51명이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또는 문화부가 관리·감독하는 협회·재단에 재취업했으며 "확인되는 재취업자 74명 중 1주일 이내에 재취업한 사람은 74%로 55명에 달했다"며 "1주일 이내 재취업자 중 29명은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에 성공했"고, "전체 재취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은 13.2일로 2주가 채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경민(민주통합당) 의원]은 "재취업자의 평균 구직기간이 2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전에 모의된 기획취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자는 문화부를 퇴직한 관료가 유관기관등에 재취업하는 것을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갓 출범한 기관의 경우, 그들의 행정경험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유관기관이 운영된다면 민간의 유능한 전문가들이 행정에 참여할 기회가 제한되며, 유연성과 창의력이 더 필요한 기관 사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도 많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관들도 채용에서 '공모'과정을 밟을 텐데, 이런 식으로 문화부출신 관료들이 재취업하는 것은 공모 과정을 불신하게 만듭니다. 말씀하신 '정책 거버넌스의 확대 구축'에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큼니다.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추진전략으로 '문화 재정의 확충'을 말씀하셨는데, 이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시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도 9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가 여러번 문제가 되었지만, 문화부 산하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도 상당한 수준에 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경제 사정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러한 부채 규모는 앞으로 문화부의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산하기관들의 부채가 이렇게 많아지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5. 마지막으로 문화부 조직에 관한 것입니다. "여가정책을 통해 모든 분야의 '수용(향수)자 대상 정책'을 통합·조정할 필요가 있게 된다"는 언급을 하셨습니다. 여가는 사실상 문화부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으므로 생산자와 직접 관련되는 분야 이외에는 여가를 중심으로 문화부 조직을 재설계하는 상상력을 발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는 "프랑스의 '문화통신부' 또는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와 같은 형태의 조직으로 적극 개편할 것을 제안"하셨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 언급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자는 현정부가 출범하면서 방통위를 제외한 구공보처의 기능이 문화부로 옮겨져서 문화부가 도로 '문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90년에 문화부가 신설된 의미는 문공부로부터 문화부의 독립이라는 정부조직의 외형적 개편 이상으로 문화가 '정부 홍보'의 부담을 덜게 된 점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문화부가 계속 정부 홍보의 부담을 지고, 문화부장관이 사실상 정부대변인 노릇을 하는 것은 시대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토론문]

차기 정부의 문화정책 과제

윤소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이 국민의 행복권 추구를 지향한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면서, 구체적으로 여가정책의 추진 방향과 관련 과제들을 제안하는 것으로 토론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정책환경에 대한 변화요구는 공급(생산)자 위주의 정책에서 수요자(향유자) 위주의 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이나 지역적으로 문화향유를 누리지 못하는 지역민들을 위해 문화시설을 짓고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진정한 문화소외계층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고, 국민들의 다양한 여가욕구를 파악하고, 그 욕구에 기반하여 시설을 개방하고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국민들의 여가활동 실태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더 나아가 잠재적인 욕구를 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적극적인 정책방향이 요구된다.

특히, 지금은 국민총행복시대를 지향하고 있다. UN차원이나 각국이 국내총생산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지표로 행복지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점이다. 이때 국민들의 행복권을 위한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도구로 인식되는 것이 ‘여가’라고 본다. 이미 UN(1948)에서는 “모든 사람은 휴식할 권리와 여가를 즐길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에는 근로시간을 적절한 수준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리와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받을 권리가 포함된다”(세계인권선언 제24조)고 하였으며, 세계여가레크레이션협회는 여가헌장(1970, 1981)을 통해 “여가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정부는 이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며, 국민은 타인의 여가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을 지닌다. 그 누구도 피부색, 성, 종교, 인종, 심신장애, 경제여건 등을 이유로 이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된다.”(여가헌장 제 1조)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OECD의 BLI 지수 발표결과 한국사회는 34개 회원국 가운데 26위이며, 특히 일과 생활의 조화와 공동생활 영역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난다고 한다. 기본적으로 일중심적인 생활에서 장시간근로로 인해 생활의 불균형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면,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일 이외의 삶의 영역(특히 문화 및 여가영역)이 균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 당연하다. 즉 일-여가균형을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지향하는 정책이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더욱이 ‘문화정책이 문화 영역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발제문 참고)고 볼 때, 장시간 근로, 고령사회, 소득양극화, 학교폭력 등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해하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문화정책의 과제와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경제적 생산성에 따라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결정짓는 경향이 있는 현실에서 문화정책의 범위와 틀 자체가 확대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성과의 잣대를 경제적 성과나 생산성 차원에서 논의하는 구조를 벗어나 사회적 생산성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더욱이 조기은퇴와 기대수명이 연장되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경제적 생산성만을 가지고 개인의 역할과 책임을 논할 수 없다고 볼 때, 개인이 사회와의 관계와 사회적 책임을 기초로 사회적 생산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정책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당연히 문화정책의 영역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의 생애주기 초반부터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나 경력 관리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여 재능기부나 문화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으며, 여가의 지속성을 위해 동아리나 클럽활동을 통한 자발적 여가활동은 지역사회 차원에서 새로운 사회적 자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들이 앞으로 문화정책 영역에서 집중될 필요가 있다.

최근 각 부처의 정책 영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가 협의하고 연계하고 논의하는 구조가 자연스러워지고 있다. 최근 100세 시대나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논의를 위해 관련 부처와 연구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구조로 나아간다면, 1인가구의 증가나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관련 연구기관이 함께 모여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사회, 경제, 문화, 과학, 교육, 가족 및 여성 등의 영역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등 협력형 정책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부처간 또는 부서간의 정책에 대한 범위와 영역에 대한 칸막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러한 칸막이 업무분할을 조정하기 위해 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 업무추진체계를 재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와 움직임도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관련 정책 영역을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1인가구의 증가로 인해 가족공동체 기반의 생활권이 지역공동체 기반으로 옮겨가거나, 무연사회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 예견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으로 급박한 문제나 이슈에 대해 얼마나 공감하고 고민하고 있는가? 문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은 이러한 고민을 함께 해야만 혁신의 틀과 내용이 가능할 것이다. 차기정부의 문화정책에서는 최소한 무연사회로 가지 않기 위해 국민들 개개인이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통해 사회적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과제가 담기기를 바란다.

[주제발표 1]

100% 대한민국,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국가적 가교를 놓겠습니다.

- 새누리당 문화공약의 신념과 방향

주 성 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나를 발견하고, 교감하는 행복

국민의 정신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증대를 위한 계획

‘사람답게 사는 삶’, ‘삶의 질’을 논의하는 오늘의 시대에서 정신문화적 가치의 증대와 나눔은 이미 세계적으로 정책적 고려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 더욱이 12위 내외의 높은 경제규모(무역협회, 2011)에 비하여 행복지수는 OECD 회원국 30개국 가운데 24위(2012)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국가경영에서 미래에 대한 기대, 자부심, 희망과 같은 정신적 풍요로움을 창출하는 문화는 경제성장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국민 전 생애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한 때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누리당의 문화정책은 ①문화국가의 초석을 세우는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문화예산의 증액 및 재정확충과 법제도 및 조직 개선의 전략과 실천 계획 ②국민의 문화적 가치 향유 능력과 기회의 증대를 위한 교육 및 복지 정책 ③창작과 발표를 지원하고 건강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한 생산 및 공급 관련 방안의 세 가지 부문을 고려하여 마련되고 있다.

유형적 계량적 평가로 가치를 논하기가 특히 어렵고 성문화된 사전 계획과 실현된 결과의 질 또는 방향이 어긋나기 쉬운 문화 활동과 사업의 속성 상, 정책의 성공 여부에는 무엇보다도 문화정책수립에 임하는 태도 및 신념의 내용과 확립이 중요하다. 취지와 방법, 시스템이 그럴싸해 보이고도 정작 수행의 과정에서 만나는 변수에 흔들려서 마침내는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을 듣는 실패한 정책을 우리는 여럿 보아왔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정책적 경험들에 대한 성찰과 문화 및 문화정책에 대한 여러 연구들을 토대로 현 시점 국가의 문화정책이 부단히 고민해야 할 논리이자 윤리를 정리해 본다. 대선후보를 통한 공약 발표를 앞둔 지금의 시점에서, 확고한 믿음 위에서 출발하는 실천은 길을 잃을 위험이 적다는 생각으로 새누리당은 문화 정책에 전제하는 비중 높은 판단과 믿음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방향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믿음 1] 문화 활동은 삶에 대한 의욕과 자존감, 창의적 사고를 증대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사회발전의 에너지원이 된다.

언어적·비언어적 문화 활동을 통하여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 표현을 이해하고 또한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교감과 자아실현의 즐거움을 얻는다. 개인적 성취감과 타인에 대한

관심 및 이해는 사회구성원의 자존감과 유대감을 강화하여 사회발전을 위한 창조적 에너지로 기능하게 된다.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규모를 갖추었으나 양적 규모에 비하여 '한 나라의 경제 환경 및 여건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이 22위에 불과하다(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2012)는 우리사회에서 문화 활동의 증진은 개인차원의 삶의 질 향상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한 사안이다.

문화재정을 확대하고, 복지, 의료, 교육 등과 연계된 문화예술 기본계획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일 것이다. 민족 간 동질성 및 유대감 형성 기여의 측면에서 예술 및 스포츠를 통한 남북교류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음을 밝힌다.

민음 2] 물질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정신문화적 가치가 삶의 질 체감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시대, 경제적 취약계층은 물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 복지 및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문화적 빈곤은 학력이나 경제력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초점을 맞춘 선별적 복지로부터 국민들의 보편적 행복추구권이라는 개념에 입각하여 특수계층을 향하는 문화정책보다는 모두를 위한 문화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기회균등, 행복추구권, 인권보장 등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기본권 개념을 정립하며 복지전달체계에서의 문화복지사의 역할, 복지 대상자의 선택을 양적 질적으로 높이는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등을 고려한다. 어린이·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은 미래의 건강한 향유자를 위한 감수성 교육, 전인적 미래인재교육으로서도 중요하다. 공교육에서의 예술창작교육의 강화와 함께 국립어린이청소년예술센터의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 상대적인 문화빈곤감, 장애인의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도 인식하고 있다.

민음 3] 이질 문화의 존중, 새로운 문화의 체험·교육은 산물보다 과정 중심적, 기능보다 상상력 중심적이 바람직하다.

사회·경제, 교육, 주거환경, 종교, 전통 등 삶의 환경으로부터 기인하는 일종의 경험의 양식, 삶의 방식으로서 문화는, 국적 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복지를 비롯한 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존중과 교류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 때 교류 또는 새로운 문화의 체험은 나은 것을 전파하는 것이기 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적 가치의 경험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촉진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교육보다 스스로의 삶으로부터 우러나는 창의적 활동을 유도하고, 결과물 맛보기식 보다 과정 중심의 체험을 중시하는 태도가 복지 및 교육 정책수립에 반영되어야 한다.

예술·스포츠강사의 교육과 제도를 개선하여 체험적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과 기회확대를 꾀하는 일, 단순한 관람이나 감상보다 인문학적 성찰을 연계한 예술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어휘력 확보를 위한 교육 등 대부분의 교육 또는 체험 관련 정책이 이러한 민음을 기반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믿음 4] 문화정책사업은 대상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이해를 전제로 하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의 자발성을 중요한 가치로 고려하고, 사후의 지속적 효과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문화정책사업은 많은 경우 산물이나 지식의 확산보다 능력과 시야, 만족감의 확대와 같은 무형적이면서 대상자의 수용정도에 따른 미래적 결과를 목표로 하여 추진된다. 따라서 생애주기(예: 노령층)나 거주환경(예: 농어촌주민) 등 대상자의 삶의 환경에 대한 세밀한 연구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대상자군의 의견반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식이나 기능의 단순한 습득이 아니라 문화예술 수용관점의 변화나 향유력 신장, 창의적 사고와 자존감 증진, 일상의 삶을 위로·치유하는 활동으로서의 문화 활동은 사후의 변화를 예상하는 계획, 사후의 지속성을 고려하는 계획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다.

문화바우처의 자발성 장려, 생활 속 예술 활동의 장려, 예술교육 등 대부분의 정책에 이러한 태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믿음 5] 문화 종사자들의 전문성은 대중친화성 못지않게 장려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문화인적자원의 시장진출, 해외교류 지원 및 경력관리, 복지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반과 창작전승 지원은 중요하다.

순수기초예술의 창작 지원, 공연 및 창작 인력의 처우개선과 취업프로그램, 공연장 상주단체의 육성 지원, 엘리트인력 육성을 비롯한 다각적 지원책이 논의 중이다.

믿음 6] 우리의 전통문화는 자랑스러운 유산이자 현대 삶을 위한 교육적 자원으로서 연구, 활용될 수 있다.

과거는 현대의 삶에서 재탄생할 때 비로소 전통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한다. 문화유산의 관리체계 정비와 문화재 환수 활동의 지속적 강화, 전통문화의 세계화와 더불어, 국내 및 아시아 문화유산의 자료화 및 콘텐츠자원화를 추진하고 창작자원화를 고려한다. 또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인성 등 청소년교육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 도모한다.

믿음 7] 문화적 기능과 함께 산업적 기능으로 우리사회에 공헌하는 문화산업을 지원한다.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문화예술콘텐츠 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지원, 글로벌 메이저로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아이템의 선별과 집중투자를 고려한다. 또한 음원·영화·방송영상·공연 분야 등 콘텐츠 관련 우리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생태계의 구축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부의 정책 수립은 과거 정책에 대한 배타적 태도보다, 새로운 정책의 창출과 더불어 성찰을 통한 과거 정책의 지속가능성, 개선점, 전환 필요성을 식별하는 작업이 모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새누리당의 문화정책팀은 과거 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물론이고 새로운 정책 마련에 있어서도 현장의 다양한 생각을 가능한 많이 청취하려 노력하고 있다. 문화정책은 별개의 단위 정책을 넘어서 사회통합, 국민행복, 미래가치 창출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 전반

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통합적 수단의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문화부와 타부처 간의 연계협력과 공동정책 입안도 고려중임을 밝힌다. 경제적 취약층과 장애인 등 물론, 국민 전체의 전 생애주기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개념, 다양한 목소리의 문화 공존을 인식하는 이른바 **문화민주주의**, 기능보다 가치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체험중심 예술교육**, 세계시장을 향한 관광 및 콘텐츠 **문화산업**의 지원, **문화인적자원의 복지**와 **전문성** 지원, **전통의 생활화**와 남북교류를 포함한 **체육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증대** 등을 고려하는 일련의 문화정책은 **자아발견** 및 **타인과의 교감**이라는 **문화활동이 지닌 개인적 행복감**이 **국민적 유대감**과 **국가경쟁력**을 증진한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구축되고 있다.

창조경제 시대의 문화정책

- 창의한국 2.0 -

양현미 (상명대 교수)

1. 문화가 행복, 성장, 국력인 시대

“문화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기초이다. 문화는 시민 개개인이 삶의 다양한 목표와 염원들을 실현해 나갈 자유로운 활동의 터전이고, 공동체를 묶어주는 공감과 정체성의 바탕이며,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의미, 아름다움의 원천이다. 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의 전 영역에서 인간의 품위와 생명의 존엄을 모든 가치의 중심에 두는 사람의 사회를 열게 하며, 시민 생활의 질을 높여 모든 이가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한다.”(문화헌장)

이러한 문화의 본원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대에 문화는 사치였다. 자식에게만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밤 새워 일만 하던 시대에 여가는 낭비였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세상이 달라졌다. 우리 부모 세대가 열심히 일한 덕분에 경제적으로 살만하게 되었고, 우리 세대가 주력한 민주화 덕분에 더 이상 주눅 들지 않고 자유로우며 당당한 세대가 등장했다.

세계적으로는 창의성이 경제적 성장, 고용, 수출을 견인하는 창조경제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니라 문화적 매력으로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는 소프트파워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이제 **문화가 행복인 시대, 문화가 경제인 시대, 문화가 국력인 시대**가 된 것이다.

2. 창조적 성장과 창조산업으로서 문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20(GDP 2만 달러)-50(인구 5천만명) 그룹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불패의 신화처럼 여겨왔던 **대기업과 수출 중심의 ‘따라잡기 전략’으로는 이후의 성장이 불가능한**, 창의와 혁신 기반으로 경제구조의 체질개선이 필요한 단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시대에 **창조산업은 문화가 갖는 행복, 경제성장, 국력의 세 가지 힘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열쇠**이다. 창조산업은 국민에게 창의성과 즐거움을 주는 행복산업이자, 고용 없는 성장, 따라잡기식 성장의 한계를 넘어 **창조적 성장(Creative Growth)¹⁾**으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경제의 출구이며, 한 나라에 대한 전망과 동경을 자아내는 꿈의 산업이기 때문이다.

창조산업은 문화유산, 예술, 미디어, 디자인과 창조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서, 세계 각국은 창조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가 발간한 <Creative Economy Report>(2010)에 따르면, 창조경제의 세계교역 규모는 5,920억 달러로 2002년 이후 연간 14%의 고도성장을 하고 있다. 창조산업의 가치를 일찍 간파한 영국은 <Creative Britain>(1998)을 통해 이를 집중 육성한 결과, 창조산업이 GDP의 6.4%, 수출의 4.3%, 고용의 7%(약 2백만명)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그림 4. UNCTAD의 창조산업 개념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창조경제, 창조산업 패러다임이 정책에 도입되지 않고 있다. 각종 비전과 계획에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만, 문화부에서는 창조산업을 일부분인 콘텐츠산업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문화유산, 예술, 디자인과 창조적 서비스를 창조산업으로 포괄하지 않고 있어 전체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확한 현황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문화유산과 예술은 비영리 영역, 문화산업은 영리 영역으로 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화산업에도 독립영화나 인디음악처럼 보호해야 할 비영리 영역이 있고, 문화유산과 예술에도 미술경매나 뮤지컬 같은 영리 영역이 있다. 디자인과 창조적 서비스 분야는 지식경제부(디자인), 건설교통부(건축)²⁾ 등 타 부처와 정책대상

- 1) 창조적 성장은 문재인 후보의 4대 성장전략 중 하나이다. 4대 성장전략은 포용적 성장, 창조적 성장, 생태적 성장, 협력적 성장이다. 창조적 성장은 사회구성원의 창의성을 증진시켜 창조와 혁신이 주도하는 역동적 성장을 말한다.
- 2) 최근 한겨레 신문에서 승효상 건축가는 건축의 문화적, 예술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건설정책에서 분리하여 프랑스나 영국처럼 문화부에서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중복되어 제대로 정책을 펴기 어렵다.

또한 스마트 혁명으로 인해 ICT 생태계를 구성하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가 참여, 공유, 소통의 문화를 일상화하고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융복합되어야 할 정보통신정책과 콘텐츠정책이 지식경제부, 문화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산되고 퇴행적인 규제가 늘어남에 따라 정책이 신성장동력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다.



그림 5. ICT 생태계 변화로 인한 문화 가치사슬체계 변화

하지만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도입하자는 것은 문화유산, 예술, 미디어, 디자인과 창조적 서비스를 내핵한 경제논리에 맡기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들은 창조산업이기 이전에 문화이고 우리의 정신이다. 공공, 비영리, 준영리(사회적 경제 영역), 영리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창조적 생태계(creative ecology)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문화가 갖고 있는 세 가지 가치 -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가치가 잘 어우러지는 정책목표와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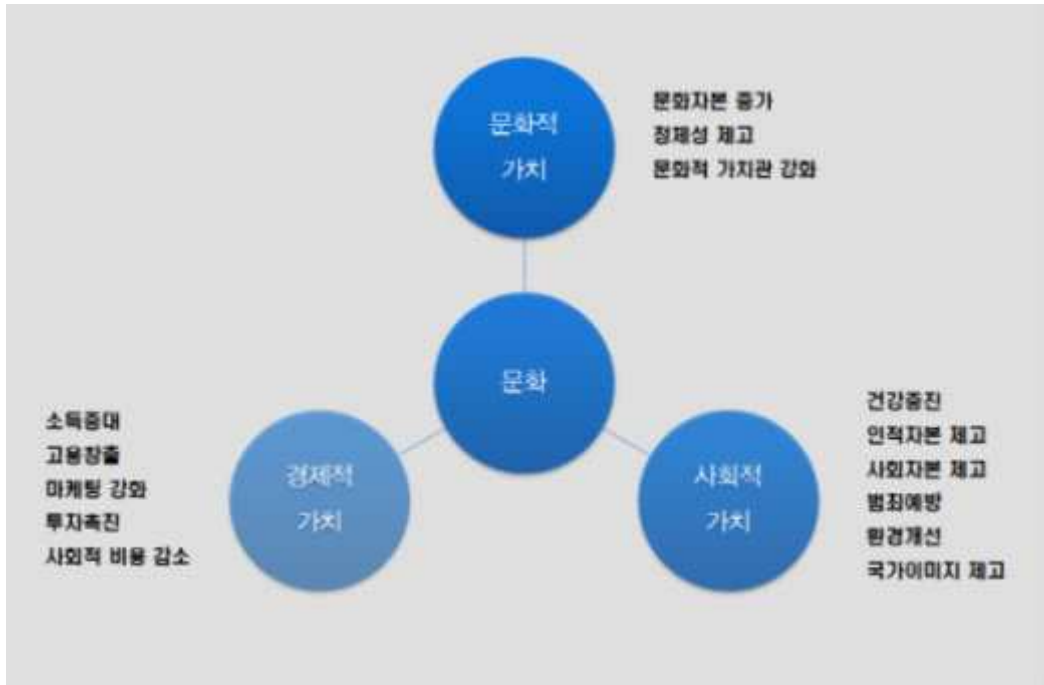


그림 6. 문화의 3대 가치와 효과

3. 창조적 생태계를 위협하는 문제들

현재 우리의 창조적 생태계는 문화가 생산, 유통, 향유되는 각 영역에서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진통을 겪고 있다.

첫째, 창조적 생태계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이 극단적 불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 세대, 지역 등에 따른 문화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월400만원이상 가구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84.7%인데 반해, 월100만원 미만은 24.6%에 불과하다. 세대간 문화양극화는 격차가 더 커서 10대와 20대의 문화예술 관람률이 90%이상인데 반해 60대이상(28.6%)은 문화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간 문화양극화는 참여정부 시기에 초석을 다진 지역균형발전정책 덕분에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도농간 문화격차는 여전히 크다.(대도시 68.8%, 군지역 56.8%) 학력과 직업간 문화격차도 커서 중졸이하(32.8%)와 농어업(36.2%)의 참여율이 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으로 살만하다고 해서 문화생활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에서 살다보니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경쟁사회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사행성, 폭력성 게임이나 술 같은 보다 자극적인 여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창조적 생태계 전체가 손바닥만 한 문화시장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셈이다.

그마저도 문화유산, 예술, 문화산업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영화 관람률만 60.3%이고 예술 관람률은 참담한 수준이다. 문학(3.8%), 미술(9.5%), 클래식음악(4.8%), 국악(5.7%), 연극(11.2%), 무용(1.4%). 문화재와 관련된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은 관광과 결합되어 있어서 47.1%로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문화시설 이용률 역시 한심한 수준이다. 도서관 20.5%, 박물관 14.8%, 공연장 11.5%로, 유럽 27개국의 문화시설 평균 이용률이 도서관 35%, 박물관 41%, 공연장 32%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그런데 이 수치도 연간 1회 관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므로, 과연 우리나라에 보편적 문화복지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국민의 문화수요에서 나타나는 이같은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창조산업, 창조경제, 그리고 문화발전은 요원한 일이다.

둘째, 창조계층은 이러한 토양 위에 뿌리내린 생명체이다. 요즘 세대는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하기 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영화과, 실용음악과 등 창조산업과 관련된 학과들은 지방대학이라 하더라도 경쟁률이 수십대 일에 이르고, 연예매니지먼트 회사에는 오디션을 보려는 청소년들로 넘쳐난다. 그러나 이들의 인권, 고용, 복지는 말 그래도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

문화산업은 규모가 커지고 많은 부를 창출하고 있지만 소수의 인기 스타를 제외한 스테프나 보조출연자들은 열악한 임금과 각종 부당 노동행위, 임금체불 등에 시달리고 있다. 한쪽 끝에 싸이가 있다면, 다른 한쪽 끝에 최고은이 있다. 스타 지망생에 대한 노예계약, ‘장자연 사건’에서 드러난 성접대 관행 등을 보면, 청소년에게 창조계층이 되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월 소득 100만원 이하인 예술인이 62.8%(수입 없음 37.4%)에 이른다. 성별 임금격차도 커서 남성보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중이 훨씬 높고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여성의 임금은 남성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예술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59.9%, 산재보험 29.5%, 고용보험 28.4%에 불과하다. 화려해 보이는 영화인의 경우 사정은 더 열악하다. 2011년 영화진흥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화인의 92.4%가 비정규직으로 이중 작품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이 63.6%에 이르며, 임금체불을 경험한 영화인은 45%에 이른다. 영화인의 4대 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 54.8%, 국민연금 12.4%, 고용보험 8.9%, 산재보험 6.9%로 예술인보다 낮다. 이런 열악한 풍토는 창조계층의 창작활동만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먹지 못해 생을 떠난’ 최고은 양의 안타까운 죽음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금의 창조적 생태계는 **약육강식의 정글**과도 같다. 창조산업을 구성하는 창조기업은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소기업과 자영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문화산업의 규모별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1-4인(30.1%), 5-9인(13.0%), 10-49인(22.5%), 50-99인(12.2%), 100인이상(22.1%)으로, 창조계층이 10인 이하 규모의 기업에 43.1%, 50인 미만 규모의 기업에 65.6%가 근무하고 있다. 또한 문화산업 분야 기업(12.2만여개) 중 약 87%가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소기업으로 경영상태가 열악하고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에 대기업이 온라인, 모바일, 오프라인 유통망을 기반으로 제작, 유통, 마케팅

까지 수직계열화하면서 불공정한 수익배분구조를 관행화하고 있다. 창작자와 유통자의 수익 배분을 살펴보면, 애플(아이튠즈) 수익모델이 창작자(70):유통사(30)인 반면, 국내 음원 유통 수익배분율은 창작자(47):유통사(53)으로 창작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창조계층과 창조기업이 계속해서 양질의 창조적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내는 일은 요원해 보인다.

넷째, 창조적 생태계가 **자율성을 잃고 정치적 잣대**에 휘둘려 몸살을 앓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문화가 숨 쉴 수 있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에 들어와서 민주정부 10년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던 표현의 자유가 한순간에 위축되어 버렸다. 풍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었고, 정부에 쓴소리를 한 PD와 연예인을 방송에서 중도하차 시키거나 고소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소셜테이너’라는 신조어는 표현의 자유가 희박해진 불행한 시대의 산물이다.

이러한 정치적 편향성은 공공기관장의 인사와 공공지원에도 적용되었다. 공공지원은 창조적 생태계에서 보자면 일종의 비료라고 할 수 있는데, 생태계 전체를 튼튼히 하는데 쓰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 하에 정치적 입장이 다른 예술인을 지원에서 배제하고 속아내는 사례가 있었다. 독립영화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었고 국제영화제의 상을 받은 영화가 심의에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꽃을 피웠기에 한류가 주는 감동은 결코 작지 않다.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청소년들이 우리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행복해 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본 영화를 그들도 눈물을 흘리며 본다.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라는 타이틀보다 우리 국민에게 실질적 자부심을 준 것은 K-POP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인 런던, 파리, 뉴욕의 청소년들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한류의 선진국 진출에 도취해있을 때, 기소르망이 뼈아픈 소리를 했다. ‘대중문화의 세계화를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다, 대중문화는 보편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세계화가 상대적으로 쉽고 다른 나라의 대중문화로 쉽게 대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고유한 전통문화, 창의적인 현대예술을 알리는데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2004년부터 7년간 96개국에 323개의 공자학원을 설립하고 소규모 공자학당도 300여개 설립했다. 또한 워싱턴, 나이로비, 유럽에 중국국영방송(CCTV) 스튜디오를 설치하여 문화를 통한 소프트파워 제고의 성공사례로 세계의 주목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세종학당은 31개국 60개, 해외문화원은 19개국 21개에 불과하다. 공자학당의 연간 운영비가 평균 1억 원인데 반해 세종학당은 4천만 원에 불과하다. 이 초라한 수치가 바로 문화가 국력인 소프트파워 시대를 우리 정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4. 창조적 생태계 복원을 위한 문화정책의 과제

이제 창조적 생태계 전체를 되살리는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혁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체휴일제를 실시, 전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유시간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관광 휴양 레저스포츠 등 관련 여가서비스 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일자리 혁명을 일으키겠습니다. 공공투자의 확대, 사회적 경제의 육성, 내수시장의 활성화, 문화 의료 교육 IT 등과 관광의 융복합화 등을 통해 문화예술, 관광레저·스포츠 분야에서 1백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어내겠습니다.

둘째, 모든 국민이 문화로 행복한 '보편적 문화생활'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격차지수'를 개발하여 낙후지역, 핵심소외계층부터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읍면동마다 북카페처럼 친근한 '복합 커뮤니티문화센터'를 3천 500개 조성하고, 젊은 예술가들로 '커뮤니티문화기획'(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센터에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하고 10만개의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 소득기준에서 중층기준으로

- '문화격차지수'를 개발하여 낙후지역, 핵심소외계층부터 우선 지원
- 문화기반시설, 문화향수실태 등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문화격차지수 도입
- 문화소외계층을 소득기준에서 소득, 연령, 지역, 학력, 직업, 장애 등의 기준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낙후지역부터, 여러 요인들이 복합된 핵심소외계층부터 우선 지원
- 문화바우처 제도의 지원자격을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가구당 지원금을 현실화

○ 제한적 문화복지에서 보편적 문화복지로

- 생활문화 인구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문화 참여율을 생활체육처럼 상향조정
- 중산서민층의 생활문화를 지원하고 국내 문화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소득 4천6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교양오락비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실버세대를 위한 생활문화 지원을 강화

○ 보는 문화에서 하는 문화로

- 문화아마추어와 문화동호회 참여율을 제고하여 보는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창작하는 문화활동을 제고
- 이를 위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동호회에게 필요한 공간, 장비, 멘토를 지원

○ 생활권 문화전달체계 구축 및 생활문화 플랫폼화

- 생활권 문화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읍면동마다 북카페처럼 친근한 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
- 문화커뮤니티센터는 작은도서관, 시민창작스튜디오, 미디어센터 등 기능도 겸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 전국 구석구석까지 문화가 싹틔줄처럼 배달되도록 젊은 예술가들로 구성된‘커뮤니티문화기획’(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문화커뮤니티센터에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전문문화시설을 양에서 질로

- 문화시설의 양을 늘리는 정책에서 질을 제고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문화시설이 생활권 내에 만 들어지도록 입지조건에 대한 심의를 강화
- 전문문화시설을 지역 문화커뮤니티센터와 연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셋째, 모든 국민이 **문화를 통해 ‘창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맞춤형 문화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우울증, 게임중독 등 경쟁사회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확대 도입하겠습니다.

○ 선택적 교육에서 의무교육으로

- 어린이에게 창의적인 놀이교육을 확대하고 청소년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을 강화하여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인재로 육성

○ 문화 배제에서 문화 힐링으로

- 학교폭력, 우울증, 게임중독 등 경쟁사회, 피로사회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해 학교, 기업, 보건소와 연계한 문화힐링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명상, 다도, 템플스테이 등 전통문화를 활용하여 진정한 쉼과 웰빙의 체험을 통해 현대인의 정신적 불안과 강박을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확대

○ 후원 대상에서 가치 제공자로

- 직장인에 대한 창의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이 직원에게 문화를 활용하여 창의교육을 한 교육훈련비에 대해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

○ 동화에서 문화다양성에 근거한 상호이해로

- 다문화 시대에 이주민에 대한 국민의 문화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학교, 기업, 지역사회에서의 문화다양성 교육을 강화
- 세계화 시대에 필수적인 국제문화 이해교육 강화를 위해 우리나라와 경제적 교류는 많으나 문화교류가 적었던 나라와의 문화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세대간 단절에서 세대간 대화로

- 산업화의 역군으로 경제발전에 이바지했으나 문화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는 실버세대를 위해서도 문화예술교육과 문화를 통한 세대간 대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넷째, 창조계층이 정치적 편견과 경제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마음껏 창의력을 펼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술인복지법을 문화예술 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문화유산 분야 종사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소득이 일정치 않은 자영, 프리랜서 예술인도 산재 및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젊은 예술인 1,000명에게 월100만원씩 1년간 창작활동을 지원, 'K-문화프론티어(Korea Culture Frontier)'로 육성하겠습니다.

○ 표현의 자유

- 민주주의와 문화발전의 근간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예술인이 정치적 입장이 무엇이든 불이익을 받는 일 없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 영상물, 음반 등에 대한 심의제도를 개선하여 창작의 자유 보장과 이용자에 대한 책임의 조화를 이루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로

- 예술인복지법을 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문화창조계층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고용된 예술인뿐만 아니라 자영, 프리랜서 예술인도 공평하게 보호
- 문화창조계층에 대한 교육, 고용, 복지, 창작지원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입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
- 예술인을 위한 법률 구조센터를 마련하여 경제적으로 어렵고 제도를 잘 알지 못하여 권리를 침해 당하는 예술인이 없도록 함

○ 좋은 일자리 만들기과 바꾸기

- 문화창조계층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예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예술인을 고용하는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영리기업, 사회적기업을 지원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의무화
- 여성에 대한 고용이 타 분야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남성에 비해 저임금과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문제점을 개선

○ 경력 경로(Career Path)를 고려한 교육과 지원으로

- 예술대학 특성을 고려한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예술현장과의 연계를 위한 '창조산업 견습생 제도'를 마련
- 대학 졸업 후 10년 이내의 젊은 예술인이 생계 걱정에서 벗어나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1,000명에게 월100만원씩 1년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문화프론티어(Korea Culture Frontier)'를 육성

다섯째, 창조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적 성장을 견인하겠습니다. 한류 수출 200억 달러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5천억원 규모로 '문화산업모태펀드'를 확대하고, 대기업이 수익의 일부를 창작자와 소기업에 지원하는 '문화엔젤펀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기초문화에

술을 육성하기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매년 2천억원씩 5년간 1조원을 지원하고, 문화예술과 문화유산 분야에서 문화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1,000개를 육성했습니다.

○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는 공공지원 확대

- 예술과 문화유산 분야 비영리단체에 대해서는 제한된 공공재원을 선택과 집중하기 보다는 일정수준 이상의 단체라면 어디든 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제고

○ 문화의 사회적 가치에 근거한 사회적 문화경제의 창출

- 예술인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문화생산자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예술인 스스로 자립기반을 마련
-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예술치료, 커뮤니티 아트, 기업창조교육 등 예술과 문화유산 분야에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문화가 가진 사회적 가치를 실현

○ 인디문화에 대한 지원 재개

- 독립영화, 인디음악 등 인디문화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여 대중문화의 실험적 창작을 진흥하고 재능있는 예술인의 등용을 지원

○ 내실 있는 중견기업의 육성

- 한류 수출 200억 달러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시스템을 구축
- 제작시스템을 선진화하고 투자환경을 개선하며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불공정 거래에서 동반성장으로

- 창조산업은 50인 이내의 작은 기업이 중심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소기업 친화정책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한 유통 중심의 수익배분 구조를 개선
- 대기업이 메세나 차원에서 문화창조기금을 출연하여 문화엔젤투자의 일환으로 소기업을 지원하고, 좌석의 5%를 문화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협력방안 마련

○ ‘블러들이는 한류’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 한류 정책이 해외진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한류로 인해 외국인이 국내를 방문할 경우 내수시장 활성화 효과가 크므로 블러들이는 한류 정책 필요
- 블러들이는 한류를 관광과 연계하여 한류 관광의 총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문화와 관광 분야의 정책 연계 필요

- 문화와 융복합을 통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문화와 기술, 지성과 감성의 융복합을 통해 제조업, 서비스산업 등 기존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함으로써 창조적 성장에 기여
- 문화용품산업과 창작스튜디오임대업 육성
 - 악기, 물감 등 창조산업의 창작과 교육에 필요한 문화용품산업과 연습실, 작업실 등 창작스튜디오 임대업을 육성함으로써 예술인과 국민에게 좋은 재료와 기자재, 스튜디오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
-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조화
 - 스마트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 기반 구축을 위해 DRM 기술을 고도화하고 저작권 법을 정비
 - 창작자, 제작자,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저작권의 합법적 공유와 교환이 이루어지는 공공 저작권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CCL 활성화

여섯째, 모든 지역이 창조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분산된 문화재정 전달체계를 통합하여 국가창조산업지원시스템(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포괄)을 구축하고, 지역자율사업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지역이 개성 있는 창조도시로 발전하도록 문화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과 문화유산을 자원기반으로 하는 창조클러스터를 지원하겠습니다.

- 창조도시 조성
 - 2014년 문화부가 이전하는 세종시와 문화예술위원회 및 콘텐츠진흥원이 이전하는 나주시를 창조도시로 조성
 -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기존의 문화도시에 대한 지속적 지원
- 창조클러스터 지원
 - 문화산업뿐만 아니라 예술과 문화재를 자원으로 하는 다양한 창조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역 문화재정 전달체계 통합 및 지역자율사업의 단계별 확대
 - 정부 문화재정 전달체계가 사업별로 상이하여 지자체나 민간이 재정을 적기에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자체로 이전되는 문화재정 지원시스템을 통합하여 국가창조산업지원시스템을 구축
 - 지자체마다 지역문화재단 설립하도록 하며,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사업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 창조도시 지수 개발 및 모니터링

- 창조도시 지수를 개발하여 지역문화의 발전 수준과 문화재정 지역이전사업의 효과를 모니터링하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와 부진한 지자체에 대한 책임의 환류를 강화

일곱째, 문화를 통해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류를 대중문화에서 한국문화 전체로 확대하고 이를 전파하는 거점으로 세계 각국에 세종학당과 해외문화원을 200개로 늘리겠습니다. 또한 한의학 한국악 한글 한식 한복 한지 등 '한국학'을 집대성하여 한류의 철학적·학문적 기반도 튼튼하게 하겠습니다.

○ 한국학 진흥

- 한옥, 한식, 한복, 한지, 한글, 한의학, 한국음악과 같은 한(韓) 스타일 모두를 포괄하는 '한국학'을 집대성하여 전세계적으로 열풍처럼 불고 있는 한류(Korean Wave)의 철학적·학문적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한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

○ 해외문화원 확대

- 특히 세계 각국에 한글과 우리문화를 보급하는 거점으로서 세종학당을 현재 60개에서 120개로 확대하고 연간 운영비를 1억원 수준으로 확대
- 해외문화원을 21개에서 권역별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100개로 증대하고 해외문화원이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는 문화단체, 문화기업을 돕기 위한 서비스 기능 중심으로 재편

○ 저개발 및 개발도상국 문화다양성 보호를 위한 협력

- 문화 ODA를 통해 저개발국에 재정, 인력, 기술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문화발전을 돕고 청년들이 글로벌 창의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 현 정부에서 단절되었던 남북문화교류를 재개하여 남북통일의 문화적 토대를 마련

여덟째, 문화유산과 문화예술의 진흥은 관광으로 피어나야 합니다. 2020년 국제관광객수 16억명 관광산업 11조 달러 규모로 예측되는 관광의 놀라운 성장성을 주목, 2017년 임기내 외래관광객을 현재 1천만명 수준에서 1천7백만명, 국민관광량을 현재 3억5천만일 수준에서 6억일 수준으로 확대하여 **관광산업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을 7%로 높이고(현재 5.3%) 관광고용 200만시대**를 열겠습니다. 여가시간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여행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 국민이 여행으로 행복한 '관광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 및 대중문화를 관광산업과 창조적으로 접목해 '불러들이는 한류'를 실현하고 '잊을 수 없는 문화한국'의 브랜드를 심어 나가겠습니다.

아홉째, 관광개발을 통하여 **지역특화 발전을 모색하고 남북 협력과 공생발전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마지막 남은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의 보고'인 비무장지대(DMZ)에 생태관광지, 'DMZ 트

레킹' 등을 조성, '세계평화생태관광지대'를 만들겠습니다. '제주올레'에서 보듯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을 활성화하고, 제주·인천·평창·여수 등에 도입된 외국인 부동산투자자이민허용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외국인 관광투자를 촉진하고 특화관광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의 지역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정여행'을 활성화하고 사회적 관광기업도 육성하겠습니다.

열째, 이러한 정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관광산업 분야에 매년 5조원씩, 5년간 25조원을 투자하고, 문화와 관광 업무 영역이 범정부적으로 걸쳐있는 만큼 전 영역에서 부처간 협력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주재로 문화와 관광분야 민·산·학·관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진흥파트너십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여가 진흥, 문화산업 육성, 지역문화 창달, 관광개발과 관광산업 진흥 등을 효율적·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체계를 새롭게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일에만 매달려 바쁘게 달려온 근대화와 산업화의 부작용, 이른바 '토건병(土建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빨리빨리'가 가져다 주는 스트레스를 일거에 해소하기 위해 성매매 폭탄주 등 자극적이고 부적절한 여가행태가 심각하다. 지난 세월 쉴 새 없이 일할 수밖에 없어 힘들었던 국민의 '사람다운'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할 때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다.

'우리의 부는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힘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지 말고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모범이 됨으로써 진정한 세계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세계에 실현되기를 원한다'는 김구선생님의 문화강국론을 구현하게 되기를 바란다.